

Venture Radar

수도권기업 지방이전時 재정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총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용지매입과 고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급적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용지매입시 분양가나 토지매입비의 50% 범위 이내, 고용 및 교육시에는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절반씩 보조하며 특히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공계 뽑으면 인건비 80% 지원

외국기업과 연구소가 국내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고

이공계 졸업자를 채용하면 100명 이내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국내에 파견되는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10명 이내에서 인건비와 체류비를 일부 제공한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5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R&D센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박사를 포함한 국내 대졸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봉 중 80%(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채용 후 2년까지 지원된다. 외국 인력에는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6월 중 주한 유럽연합상의·미국상의·재팬클럽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사업자 정보안전진단 의무화

오는 7월 말부터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쇼핑몰, 포털 등은 매년 한차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해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매년 한차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용대상은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ISP, 데이콤 자회사인 KIDC 등 6개 서버뱅크,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수 50만명 이상의 120여 개 전자상거래업체 등이다.

중소·벤처 공동물류 A/S센터 이용 희망 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

盧대통령,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가 지난 5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은 "중소기업은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혔다.

협회 장흥순 회장(터보테크 대표)은 "벤처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적극 구매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김형순 부회장(로커스 대표)은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몰릴 수 있도록 지방마다 특화된 벤처기업육성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김태희 부회장(씨앤에스 대표)은 "중소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쓰러지는 것은 정작 제품화단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20명 이외에 경제부 이현재 총리, 산자부 이희범 장관, 정통부 진대제 장관, 노동부 김대환 장관, 기획예산처 김병일 장관,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물류 A/S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현지에 물류 및 A/S 기반이 없어 발생하는 수출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참여 중소기업은 물류 및 A/S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교포기업을 통해 마케팅 및 현지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는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전에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등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정책과(02-2110-7073~5),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하면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시험연구장비 무료 개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지방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5000여 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없이 각 지방중기청의 시험 및 연구장비를 이용하거나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중기청은 지방청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지난 2002년 3000여업체에서 지난 해 3800여개사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연구장비 무료개방으로 중소기업 개발비용이 연간 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기·벤처 살리기 일환으로 통합계약생산서비스(ICMS) 지원

정부가 중기·벤처 살리기의 일환으로 통합계약생산서비스(ICMS) 지원에 나선다. ICMS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손을 맞잡고, 각 기업은 핵심부문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비핵심부문은 협력사들에게 전담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상생을 위한 윈-윈(Win-Win)전략으로 채택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ICMS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좋은 모델로 판단된다"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ICMS를 위한 인프라 구성 및 홍보에 지원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높을 경우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고 현안과제를 공동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립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5월 20일 여의도 기협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중앙회 김용구 회장, 벤처기업협회 장홍순 회장, 벤처캐피탈협회 광성신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유원영 회장, 한국IT중소벤처연합회 고시연 회장 등 13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중앙회 측은 "경영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단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체간 협의 및 연계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벤처 이슈

중소벤처 "어려워도 빛은 갠다"



머니투데이

벤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망기가 돌아오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와 달리 아무리 어려워도 빛을 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벤처·중소기업가의 의식이 매우 성숙해있음을 보도한 기사

▲ 2004년 5월 22일자 머니투데이 5면



헤럴드경제

준비된 벤처인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2004년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외 벤처넷구인구직서비스, 1사1인 채용운동 등 협회가 추진 중인 채용관련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특징점을 자세히 보도한 특집기사

▲ 2004년 5월 24일자 헤럴드경제 12면